

# ‘낙상 위험’ 농촌이 높지만 ‘낙상 사고’ 도시가 많아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 조사  
‘100세인’ 농촌과 도시의 차이

낙상 위험 농촌 34.1%·도시 10.8%...경험 농촌 20%·도시 31.7%  
마을 밖 이동 농촌 48%·도시 27%...요양혜택 도시 89%·농촌 63%

농촌 사는 95세 이상 어르신(백세인)의 낙상 위험이 도시의 백세인보다 3배 이상 크지만, 낙상 비율은 10%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활동범위는 농촌 백세인이 도시 백세인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의 다학제 연구팀이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광주(동·서·북구)와 화순군에 거주하는 백세인 142명(광주 88명, 화순 54명)을 대상으로 한 양 지역의 생활 환경 조사 결과 보고서인 ‘농촌(화순)과 도시(광주) 백세인의 삶과 라이프스타일(발표: 이정화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농촌과 도시 백세인은 주거환경 위

험평가·활동 범위·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비율 등에서 뚜렷한 상대적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 기간·주관적 건강·생존 자녀 수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거환경위험(구조적 위험, 방·부엌 위험, 욕실·화장실 위험, 외부 위험) 부문에서 농촌 주택의 구조적 낙상위험은 34.1%(44가구 중 15가구)로, 도시의 10.8%(65가구 중 7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실제 낙상을 경험한 백세인의 비율은 농촌(20%)이 도시(31.7%)보다 10%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신체 활동량 및 근골격계 기능 차이, 보행 환경, 생활환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위험을 인식하는 태도와 대처 행동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표본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활동 범위에 있어서 농촌 지역인 화순에 비해 광주에 거주하는 도시 백세인이 훨씬 제약적이었다. 활동 범위를 방 안, 집과 이웃, 마을 안 멀리, 마을 밖 4개 구역으로 나눈 조사에서 도시 백세인 10명 중 7명 이상(72.6%)은 ‘방안 또는 집과 이웃 집’이 이동 범위가었으며, ‘마을 안 멀리 또는 마을 밖’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27%였다. 반면 농촌 백세인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가 ‘마을 안 멀리 또는 마을 밖’까지 이동해 도시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성별로 보면 ‘마을 밖’까지 이동하는 남성은

농촌이 70%인데 비해 도시 백세인은 20%였으며 여성은 농촌 13.6%, 도시 1.9%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정화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건강·교통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마을 거주기간, 사회적 관계 등과 연관이 있다”면서 “농촌에 비해 주거 장소를 바꾸는 이사가 잦고, 사회적 교류도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 백세인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마을 거주 평균기간은 광주 19.62년, 화순 54.63년으로 장소 애착·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또 집에 거주하는 양 지역 백세인에 대한 재가 급여·시설 급여·복지 용구 등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비율은 도시 백세인 89%, 농촌 63%의 차이였다. 이같은 요양 서비스 차이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또는 도시 지역 백세인의 기능 수준이 농촌에 비해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를 통해 양 지역의 어르신들이 장수하게

된 공통점도 밝혀졌다. 고연령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자신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이 광주 49%, 화순 54%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교육기간도 도시 4.19년, 농촌 3.38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백세인을 돌보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는 자녀 수에 있어서도 광주는 평균 생존 자녀 수가 4.26명이었고, 화순은 5.04명으로 비슷했다. 이정화 교수는 “백세인의 삶에 지역사회 환경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곳에서 백세인이 더 질적인 삶을 사는데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백세인의 삶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농촌과 도시 백세인의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각 지역사회가 행복한 백세인의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서울시·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 청사 폐쇄 12·3 내란협조 수사

내란특검, 계엄 가담 여부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서울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들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께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0시 8분께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했다.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먼저 지

시 사항이 전파됐다는 것이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지시 시각보다 빠른 12월 3일 오후 11시20분께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청사 폐쇄에 나서므로써 계엄에 동조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행안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청사 폐쇄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부터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들이 모두 계엄 동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법적 해석에 대한 이론의 여지도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일단 기초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 착수를 선언하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국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적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 역시 박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국법원장회의의 전대법원행정처장이 지난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해야”

내란 사건 1·2심 재판 심리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룬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법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

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

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험이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본 제작물의 사용된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

최고의 성공을 약속하는  
**영광 대마 일반산업단지**

현장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 남산리 일원

### 위치 및 교통물류 인프라 - 기업하기 좋은 곳, 영광군

전라남도의 관문, 고속도로 영광 IC 5분거리, 광주 25분거리

특별 분양 혜택	1	잔여 5필지 특별분양	3	국내 유일 전기요금 지원!	분양 문의	<b>061-352-1231</b>	
	2	군 보조금 특별지원	4	전업종 즉시 입주 가능! (제한 업종 제외)			
						건폐율: 80%   용적율: 350%   분양가: 11만원대/m <sup>2</sup>	